
'04-'05 여성정책의 성과와 전망

☐ 일 시 : 2004년 12월 20일(수) 14:30 ~ 17:00

☐ 장 소 : 한국여성개발원 공동의 장 5층 국제회의실

한국여성개발원

일 정

14:00 - 14:30 <등 록>

14:30 - 14:45 <인사말> 서명선 원장(한국여성개발원)

14:45 - 15:25 <사 회> 김양희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개발원)

주제 I : 중앙부처 여성정책의 성과와 전망

<발 표> 조진우 과장(여성부 정책총괄과)
최진 팀장(문화관광부 여성문화 TF)

15:25-15:55 <토 론> 조영숙 사무총장(한국여성단체연합)
이혜경 대표(여성문화예술기획)

15:55-16:35 주제 II :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발 표> 박현경 국장(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이영세 실장(충남여성정책개발원)

16:35-17:00 <종합토론> 2005 여성정책 전망과 과제

17:00 <폐 회>

목 차

주제 I. 중앙부처 여성정책의 성과와 전망

| | |
|-------------------------------|----|
| 2004년 중앙부처 여성정책의 성과와 전망 | 1 |
| 1. 정책 추진 체계의 정비 | 4 |
| 2. 여성인력개발 | 5 |
| 3. 여성대표성 제고 | 7 |
| 4. 호주제 폐지 | 7 |
| 5. 여성부 집행 정책 | 8 |
| 6. 향후 과제 | 12 |

| | |
|--|----|
| 여성문화정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움직임들 | 19 |
| 시작하는 말 | 21 |
| 여성문화TF를 중심으로 | 21 |
| 첫 번째 세부실천과제로 문화기관내 여성화장실 확충 등 추진 | 22 |
| ‘창의한국’ 문화비전에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제시 | 22 |
| 성 인지적 관점에서 문화정책 분석 평가 그리고 행복한 파문 만들기 | 22 |
| 새로운 정책영역 및 모델 개발 - 여성문화와 관광의 만남 | 24 |
| 여성문화인물 발굴 확대 | 24 |
| 여성문화 TF의 성과와 한계 | 25 |
| 향후 발전적 추진전략 - 2005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 25 |

토론. 중앙부처 여성정책의 성과와 전망

| | |
|------------|----|
| 토론 1 | 28 |
| 토론 2 | 31 |

주제Ⅱ.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 | |
|--------------------------------|----|
| 江原道 女性政策의 現況과 課題 | 33 |
| I. 江原道 紹介 | 35 |
| II. 江原 女性政策의 目標와 推進方向 | 36 |
| III. 2004年 主要成果 | 37 |
| IV. 2005年 主要施策 推進計劃 | 38 |
| V. 地方自治團體 關心事項 | 39 |
|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 41 |
| I. 여성정책기구 | 43 |
| II. 여성관련예산 | 43 |
| III. 2005년도 주요 여성정책 추진계획 | 45 |
| IV. 지방 여성정책의 과제 | 46 |
| 종합토론 | 49 |

주제 I : 중앙부처 여성정책의 성과 및 전망

2004년 중앙부처 여성정책의 성과와 전망

조 진 우 (여성부 정책총괄과장)

2004년 여성정책을 한마디로 묘사하면 안정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인 여성정책은 여성부와 여성정책담당관실, 그리고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연계되는 추진체계가 정착되었고, 그 기반 아래 각 분야별 정책 과제가 일정한 성과를 보였다.

여성정책 중 금년에 특히 중점이 두어진 분야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 과제였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여성인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여성부 주관으로 여성인력DB 등의 구축 사업이 이루어지는 한편, 청와대에는 균형인사비서관이 임명되고, 중앙인사위원회에는 균형인사과가 설치되어 여성의 공직 진출관련 정책을 심도 있게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치 분야에서는 정당법의 여성 비례대표 50% 할당조항의 효과와 새로운 정치세력을 열망하는 민의가 화학작용을 일으켜 17대 총선에서 여성국회의원이 전체의 13%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하반기에는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에 따른 여러 논의들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단일 정책에 대한 사회의 반응으로써, 전체 여성정책의 성과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여성정책의 총괄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부는 출범한지 4년차를 맞아 부처 출범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르거나 결실을 맺는 해였다. 특히 지난 해 출범한 참여정부의 개혁 추진과 어울리면서 보육기능의 여성부 이관과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 정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확대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2004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여성정책의 성과를 종합하고 이를 통해 2005년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여성정책 추진의 중추기관인 여성부의 정책 추진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여성정책은 그 성격 상 대부분의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성정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에서는 함께 다루어져야 하나, 현재 시점에서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여성부가 지난 10월 조사한 「여성정책책임관 업무추진현황」 자료 중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6개 부처 및 여성정책 추진실적이 뛰어난 과학기술부, 국방부, 경찰청, 조달청의 업무내용을 부록으로 첨가한다.

1. 정책 추진 체계의 정비

(1) 정책 연계 체계

2003년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전 중앙행정기관에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였다. 여성정책책임관의 1차적 업무는 부내의 정책 추진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 여성 공무원의 권익향상에 관여하는 일이다. 이외에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명시된 관련 정책과제의 수행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첫 지침이 통보된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는 앞으로 여성정책의 주류화와 관련하여 여성정책책임관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다.

여성부는 금년 2월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여성정책담당관실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문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여성부는 기존 5개 여성정책담당관(교육, 법무, 행자, 농림, 복지)과 노동부와 매월 1회 개최하던 여성정책담당관회의의 참석범위를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국방부, 국무조정실까지 확대하여 여성정책 추진 구조를 변화시켰다.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가 정착되면 이들 부처에도 이를 전담할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스템 도입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2002년 12월 11일에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규정에 의거해 정책 수립·시행과정에서의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남녀 평등한 결과가 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업의 주무기관인 여성부 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자 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방향, 절차, 대상정책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침에 따라 정책의 분석·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석·평가 계획 및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여성부장관은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한시적으로 여성부 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지원 및 자문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여성부는 우선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범사례를 수집하고 평가 절차 및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후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0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계획 및 지침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통보하였다. 아울러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책임관회의 등을 통해 이를 각 기관의 수행자들이 잘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홍보 및 협조 요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던 많은 정책결정권자들이 이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자로 나서게 되었다. 이는 참여 정부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 자세를 강조하고 있고 정책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환경적 요소의 도움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전면 적용이 가능하지만, 2004년은 시행 첫 해임을 고려하여 평가 지표의 타당성 및 평가 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모범 사례를 축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책임관회의를 통해 각 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현재 시범사업에는 총 9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 여성인력개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도약해야 할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고학력 여성은 많이 양성되고 있으나 실제 활용실태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로 OECD 회원국 중(평균 78.4%) 최하위에 속한다. 앞으로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율을 70.0% 수준까지 증가시켜야만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 여성부는 범정부 인적자원개발계획 중 여성인력개발부문 계획을 통해 여성친화적 노동시장기반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여성인적자원 활용 정책을 실시해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53.5%로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인력개발정책의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는 여학생에 대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이 학업을 마친 후 취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

도록 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노동부는 취업 여성이 출산과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성보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금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 등에게는 여성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하였다.

여성부는 전국 51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 도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위치한 지역특화산업 및 교육여건을 반영한 자체 교육커리큘럼 편성하여 사회적 일자리 교육과정을 개설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성부는 이 사업의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2004년 8월 추가경정예산 20억원을 더 확보하여 중소기업 여성취업지원의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취업의 욕을 가진 미취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채용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수요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후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한국생산성본부 등 전문기관이 지원하고 있다.

고학력여성의 경력개발과 인력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03년도부터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를 전국 권역별 5개 대학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여대생 특화의 진로지도, 경력개발, 취업실용 분야 및 지역특화산업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 2년차인 2004년에는 이 사업의 선도효과에 힘입어 여성부가 직접 지원하는 5개 대학 외의 대학들도 자발적으로 동일한 기능의 센터를 자교에 설치하고 이들 20여개 대학들이 모여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대학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들 센터는 직업관련 교과목, 재학생 및 동문 네트워크 구축, 기업 인턴십, 해외기업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학 내 여대생 인적자원개발의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유망업체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고학력 여성의 높은 사회 진출 욕구를 반영하고 부족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지역사회 산학협력단을 구성하여 취업을 연계하고 전문분야교육, 직무수행교육, 취업대비교육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한다. 2003년 전국 8개 대학에서 시행하여 55.2%의 취업률을 기록했고, 2004년에는 전국 12개 대학에서 시행 중이다.

3. 여성대표성 제고

UNDP가 발표한 2004년 한국의 여성권한척도는 78개국 중 68위였다. 415 총선을 통해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급상승했지만, UNDP의 통계 취합시점이 3월이어서 이에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따라서 내년에는 최소한 10위정도의 등급상승이 기대된다. 하지만 여성국회의원 13% 정도의 결과로는 구조적인 여성 저대표성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권한척도를 구성하는 변수 중에는 공사 영역에서 여성 관리 행정직 비율이 포함되는데, 이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비율도 5%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균형인사과를 두고 공직 임용에 있어서 여러 제약 조건들과 차별을 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5급 이상 여성관리직 비율을 2006년까지 10%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중의 일부는 현재 인사위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직 여성 공무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여성부는 매년 두 차례 정부 각 기관이 운영하는 각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위원의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2004년 6월 현재 여성위원의 참여율은 32%이다. 여성부는 2007년까지 이 참여율을 40%까지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 참여한 여성들이 해당 위원회가 관여하는 전문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성위원간 네트워크와 멘토링을 위해 여성위원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다.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성 전문가들을 발굴하고자 여성인력 DB화 사업을 추진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인재DB에 등록될 인사 3000여명과 기타 여성부의 인력풀로서 활용할 여성인사 1만5천여명의 정보를 구축하였다. 이들 인사 중 자신의 신상 공개에 동의한 인사들의 정보는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전문인력DB에 수록된다.

4. 호주제 폐지

2003년도 정부는 호주제 폐지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했고, 그 결과 국무조정실은 호주제폐지추진정책을 2003년도 정책평가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참여정부정책 중 가장 잘된 정책으로 평가하였고, 국정홍보처는 참여정부 10대 정책뉴스로 선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제폐지를 담고 있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못했다. 정

부는 2004년 17대 국회가 구성된 후 다시 정부안을 의결하여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다.

민법개정안은 호주관련 조항을 전면삭제하고, 자녀의 성(姓)은 부성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를 통해 모성을 따를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통해 자녀의 성(姓)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2004년 정부안은 2003년 안과는 달리 가족의 범위를 재규정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우선 차별적 가족문화에서 벗어나 평등한 가족문화가 창출될 것이다. 호주제 폐지를 통해 차별없는 가족문화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지향하는 양성평등한 사회와 탈권위주의적 사회, 더 나아가 모든 유형의 차별이 없는 선진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여성의 경제활동은 더욱 촉진될 것이며, 우리가 꿈꾸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는 살기 좋은 사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5. 여성부 집행 정책

(1) 보육정책

여성부는 2004년 6월 12일부터 보육정책을 추진하는 주관부처가 되었다. 여성부는 보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임 확대를 통한 공보육의 체계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안심하고 낳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의 기틀을 만들고자 준비하였다. 법이 개정된 3월부터 주어진 유예기간 3개월 동안 여성부와 보건복지부는 업무 이관을 위한 이관협약서를 체결하고 T/F 팀을 구성하여 상호 유기적 협조를 했다.

앞으로 여성부가 추진할 보육정책의 방향은 공보육의 틀을 닦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장애아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하던 것을 일반 아동들에게도 확대 실시하는 한편, 2008년까지 정부가 총 보육비용의 50%를 분담할 것을 목표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0~4세아의 경우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을 확대해 보육지원을 받는 대상 아동이 현재 26.5%에서 2008년에는 70%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부는 2005년 보육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¹⁾

지난 1991년 제정 이후 처음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살펴보면, 내년부터는 보육시설 설치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 또 보육교사의 등급을 3등분으로 세분화하고, '국가공인자격증제' 도입을 통해 교사의 자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 보육시설이 자율적인 개선을 도모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아, 영아 등 취약한 보육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영아 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에 설치의무 사업장 규모를 현행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남녀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조정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육시설의 확충 못지않게 보육정보의 전달체계 등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금년 4개소 설치를 끝으로 지역의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겸비한 보육정보센터가 16개 시도에 설치가 완료 되었다. 여성부는 이를 계기로 중앙과 광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보육정보센터 체계를 재정립하고 기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전국의 영유아 보육, 교육 수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2억원을 확보하여 전국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조사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보건사회연구원, 여성개발원, 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2005년 2월까지 실시한다. 전국 보육담당 행정기관 및 보육정보센터, 보육시설을 연계하는 「보육행정정보망」 구축을 위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2) 성매매방지대책

효과적인 성매매 행위의 예방과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할 보다 현실적인 법률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지난 3월 법무부 소관의 「성매매알선등처벌법」과 여성부 소관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들(이하 성매매방지법으로 통칭)의 특징은 성매매 행위에서 파는 자와 사는 자 외에 이를 중간에 매개하는 자(일명 포주)도 범법자로 취급하여 이익을 몰수하는 등 오히려 무거운 처벌

1) 글을 쓰고 있는 시기까지 2005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으로 볼 때, 2005년도 보육예산은 전년보다 51%이상 증액된 6077억원임.

을 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성매매를 한 여성들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2년 여성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매매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전국 성매매업소는 8만여개소, 종사여성은 33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전국 35개 지역에 집창촌이 있고 그 곳에서 1,588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2003년 6월에는 국무조정실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이 구성되어 성매매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인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04. 3. 31).

성매매방지법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9월2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유예기간 동안 여성부는 탈성매매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 및 성매매피해자 창업자금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38억여원을 복권기금으로부터 출연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찰청은 『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긴급구조전화 117 개통하였다. 법 시행 이후에는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0월 22일 현재 총 1,575건, 4,365명을 검거(남 3,176명, 여 1,189명)하였다. 이를 영업형태별로 보면 유흥업소 14%, 출장마사지 5%, 집창촌 4%였고, 피의자 유형별로는 성 매수남이 54%, 업주가 19%를 차지했다.

법 시행 한달을 넘기면서 국내적으로는 성매매가 범죄라는 사실을 대다수가 인식함에 따라, 성매매가 너무 많고 이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피해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부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여성부가 주최한 「국제인신매매방지전문가회의」에서도 해외에서 참석한 이 분야 전문가들이 성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격려하였다.

여성부가 추진하고 있는 피해자 자활보호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포함된다. 첫째,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상담, 숙식, 직업·취업훈련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선불금 등 제반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1인당 최대 35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이외에 심리치료를 포함한 의료비로 1인당 최고 300만원, 직업훈련 또는 교육비용으로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탈성매매 여성의 자립을 위해 창업자금을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1년 거치 3년 무이자 상환 조건으로 대출한다. 여성부는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2004년에 예산으로 29원, 복권기금으로 38원을 확보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집창촌에 거주하던 여성 중 일부 여성들은 여

성부가 지원하는 시설에 입소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들 비입소여성
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상담, 법률·의료지원을 비입소자에
게까지 제공하도록 상담소와 시설의 개방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3) 성희롱예방과 남녀차별 피해조사

남녀차별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지속하여 방문조사·
온라인 시정신청 활성화, 상담예약제 도입 등 수요자 중심의 사건 처리 방식
을 강화하였다. 특히 남녀차별 신청사건 평균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03
년 상반기 평균 84일이었던 처리기간을 '04년 상반기에는 48.2일로 단축하였
다. 여성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지역별 『남녀차별이동신고센터』를 운영
하여 부산, 대구, 광주 등 9개 지역에서 성희롱예방교육·홍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4)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

아동 성폭력의 증가와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를 예방하고 피해에
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13세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을 중심으로 상
담·의료·법률 및 수사지원 등을 One-Stop 처리하는 시스템 마련하였다. 6
월에는 서울지역에 『해바라기아동센터』를 개설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6천 가구를 표본조사 (한국
갤럽조사연구소, '04.9~12월)하였다. 아울러 가정폭력은 속성상 재발하는 경
우가 많아 복권기금 사업을 통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검찰), 상담위탁처분
자(법원) 등을 대상으로 가해자 교정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을 하였다.

(5) 여성단체와의 협력

2004년에도 여성단체와의 정책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사업으로 20억
원의 예산으로 총 119개의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여성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16개 시·도 단위별 사이버 '여성자원봉사 네
트워크' 운영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여성자원활동 전문성 제고와 선
진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의 세대별 확산을 위해 공모를 통해 36개 여대생 자원봉사프로그
램을 지원하였다. 올해에도 여성자원봉사자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총

5만여명이 가입하였다.

2003년 개관한 여성사전시관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7월 5일부터 10월31일까지 “여성, 배움을 통해 세상을 그리다”라는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였다.

(6) 여성발전기금 운영

1997년부터 조성이 시작된 여성발전기금은 1998년부터 매년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에는 총 정부출연금 80억원과 복권기금 89억원, 그리고 태평양으로부터 2억원 등 총 171억원을 출연받아 271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다. 이 중에는 여성인력개발사업 41억원, 복권기금 사업 89억원, 대출사업 130억 등이 포함된다.

(7) 국제협력

국제협력사업으로 제4회 세계한민족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며, 11월에는 국제회의나 국제기구에 파견할 4기 인턴을 선발하였다. 그동안 여성부는 매년 외국어 능통자 10-15명을 선발하여 여성부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국제기구에 인턴십을 가는 경우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었다.

6. 향후 과제

여성정책의 향후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2005년 전반기에 변화될 여성부의 기능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부는 앞으로 여성정책과 함께 가족정책도 다루어야 하므로 두 정책간의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다. 여성정책의 입장에서 가축문제가 부각되므로써 남녀평등문제가 희석될 것이 염려되고, 가족정책의 입장에서 지나친 남녀평등 정신이 가족 전체 구성원간의 조화를 지향하는 정책목표와 상충될 것이 염려된다.

여성정책 측면에서 여성부는 한국여성개발원과 「성인지전략 기획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과 주요 여성정책 조정업무와 관련한 개별입법 등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입법 필요성이 제시되는 분야는 첫째, 각 부처에서 시행할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과, 둘째, 여성의 체계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관과 기금의 기능을 지정하는 법이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3년차 시행을 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 이 일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는 과정과 상호연계 될 것이다.

(참고자료)

▶ 각 부처가 추진한 여성정책 정리

(1) 교육인적자원부

- ◇ 교육행정직으로의 여성진출 추진
 - 양성평등한 관리직 임용을 위한 자체목표율 이행
 - ※ 권장 목표율 - 서울, 부산 : 30%, 기타 시·도 : 20%
- ◇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추진
 - 대학교원양성평등위원회 설치
 - 국공립대 양성평등조치계획 운영지침 시달
- ◇ 여학생 친화적인 수학·과학 프로그램 확산 및 교사연수
- ◇ 학교 성교육 추진지침 수립 및 성교육 지도·지원
 - 각종 교원연수시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강좌 개설 권장
 - 성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 과정 연수 과정운영

(2) 법무부

- ◇ 수사절차상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TF 구성·운영('03.7~'04.7)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관련 범죄 수사매뉴얼 개발
- ◇ 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대비
 - 아동 성폭력 전담검사, 전문가 세미나 개최('04. 2.)
 -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 시행('04. 3.)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등 성매매 관련 법률 제정 홍보
 - 성매매 관련 법률 홍보책자, 영문 책자 등 발간·배포

(3) 행정자치부

- ◇ 「'04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양성평등의식교육 운영 관련내용 반영
- ◇ 여성공무원 고충상담 민원 창구 운영
 - 「여성과 공직」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 개설 운영, 고충상담(424건)
-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추진
 - 모집단위 5명 이상의 공무원 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 적용
- ◇ 관리직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02~'06) 추진
 - '02년말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 자치단체 5.3%, 중앙 부처 5.5%
- ◇ 정부중앙청사 직장보육시설 설치 추진
 - 설치장소 확보 : 창성동 정부합동청사
 - 2004년 관련예산 확보 : 합동청사 리모델링 및 청사보육시설 설치비 65억원

(4) 농림부

- ◇ 안정적 농촌정주를 위한 여성농업인 삶의 질 제고
 - 농가도우미 지원 : 1,037백만원('03), 1,152백만원('04)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30,221백만원('04)
- ◇ 체계적인 여성농업인육성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정책 중간평가 연구 용역('04)
 - 농림공무원 대상 여성농업인 정책반 운영 : 34명('03), 50명('04)

(5) 보건복지부

- ◇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 성차별적 조항 개정
 - '여자종업원의 수...'를 '안마사를 안내하는 종업원의 수...'로 개정
- ◇ 복지부문의 성 인지적 통계생산 방안 마련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보고서식, 조사통계의 성별분리 서식 마련
- ◇ '참여복지5개년 계획'에 성 인지적 관점이 포함되도록 협의
 - 복지정책 모든 영역에 성 인지적 관점 반영하는 총론적 접근 등
- ◇ 분할연금 수급권 강화로 여성수급권 확대
 - 분할연금수급권자가 재혼한 때에 그 재혼기간동안 해당 분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 삭제

- 분할연금수급권자에게 다른 급여(노령연금을 제외)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는 그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중 하나만을 지급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지급은 정지(국민연금법 제57조의3)
- 분할연금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신설)
- ◇ 「노인복지분야 성인지적 통계자료 생산방안」 연구완료
- ◇ 여성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고용 등을 통한 일거리 제공 (7천명)
- ◇ 「장애인복지분야 성인지적 통계자료 생산방안」 연구
- ◇ 등록 장애인현황 중 유형별 여성장애인의 현황 분석
- ◇ 취약계층 여성가구주 사례관리시범사업 추진('04년)

(6) 노동부

- ◇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운영(4.1-4.7)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 및 정부포상(61개소)
- ◇ 성·장애·연령 등을 사유로 하는 고용상의 차별개선을 위해 『고용평등 촉진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 ◇ 모성보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 ◇ 모성보호급여 지원
- ◇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장려금 지원
- ◇ 여성가장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창업)이 용이한 분야 취업훈련 실시

(7) 국방부

- ◇ 「성인지력 향상」 과정 실무위탁 교육 추진
 - '04년도 8개기 320명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여성부 예산지원
- ◇ 기혼여군의 군 업무와 가정양립 인프라 구축
 - 「육아휴직기간의 진급최저복무기간 산입」 군인사법 개정(안) 건의
 - 「6개월이상 육아휴직자 행정부수병력 대상에 포함」 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 규정 개정(안) 건의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결원보충 근거 규정 신설
- ◇ 군내 여군(성) 인력 발전 워크숍 실시

- ◇ 해 · 공군 여군학사장교 장기복무 / 진급제도 개선
- ◇ 여군발전단 여군 고충처리 센터 운영
- ◇ 여군발전단 홈페이지 구축 / 운영 활성화

(8) 과학기술부

-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04.7)
- ◇ 제1차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개최('04.9.20)
- ◇ 여성과학자 전담사업의 지속적 추진
 - 우수여성과학자 도약 연구 지원사업 등 85억 지원
-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 및 국공립 이공계 대학에 매년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 및 교수 신규채용시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채용하도록 권고('06년 : 15%, 10년 : 20%, 최종 30%)
 - 25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74개 국 · 공립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연구소, 이공계 대학 등
- ※ '03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실적 : 18.2%

(9) 조달청

- ◇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 전담반」을 설치 운영
- ◇ 여성기업 판로 지원
 - 3천만원 이하 소액 물품 구매 및 1억원이하 소규모 공사(전문공사 7천만원, 통신공사 3천만원이하)는 여성기업과 수의계약
 - 단체수의계약 지정물품 계약시 여성기업에 우선 물량 배정토록 협조
- ◇ 물품구매 및 용역입찰 적격심사시 신인도 가점(0.25 ~ 1점) 부여
- ◇ 시설공사입찰 적격심사시 우대
 - 여성기업과 공동도급(10% 이상)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의 10% 가산
- ◇ 우수제품 선정시 우대
 - 우수제품 선정 심사시 여성기업이 생산한 신기술제품(KT, NT, EM, 특허 등)에 행정평가 점수 우대
- ◇ 조달청, 여성기업 지원 확대 계획 (2004.11)

(10) 경찰청

- ◇ 성폭력 피해자 진술 녹화실 전국경찰관서에 설치(240개관서)
- ◇ 여경조사 신청제도 도입 전국실시
- ◇ 장기미아 추적전담반 전국14개 지방청에 설치
- ◇ 「대여성·아동범죄 수사 사례집」 제작 전국 배포(2,500부 제작)
- ◇ 「여성아동범죄 실무매뉴얼 I」 책자 제작 전국 배포(2,500부 제작)
- ◇ 「여경발전방안」 논문발표회 기획 및 책자 제작배포(700부 제작)
- ◇ 미아찾아주기센타 전국 통합 실시 : DNA 활용 미아찾기 활동 실시

주제 I : 중앙부처 여성정책의 성과 및 전망

여성문화정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움직임들

최진 (문화관광부 여성문화TF 팀장)

시작하는 말

여성. 문화. 그리고 정책

여성과 문화,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두 단어의 조합이다.

그러나 ‘여성문화’ 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너무 쉽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단어가 되어버린다. 또 거기에다 정책이라는 단어까지 붙이게 되면 더욱 그렇다.

여성문화정책

무엇을 의미하고 또 지향해야 하는 것일까?

여기서는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에 소속되어 있는 필자가 여성문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기로 하겠다.

여성문화TF를 중심으로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은 대내외적 문화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상시적 과정으로서의 문화행정혁신을 꾀하고자 기존의 각 실국 중심의 제도권 조직 외에 전략적 과제 중심의 유연한 TF구조를 구성하게 되었다.

여성문화 TF는 제2기 문화행정혁신위원회의 16개 TF 중 하나로서 21세기 패러다임의 큰 변화 가운데 하나인 ‘여성’의 문화정책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양성평등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열린 토론회²⁾를 기점으로 여성문화 NGO 등의 정책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문화의 새로운 흐름에 따른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또 대내적으로는 남성중심적 조직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여성문화TF³⁾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2) 2003년 2월6일 (사)여성문화예술기획, 문화연대, 여성신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우먼타임즈,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 또하나의 문화 등 공동주최로 『양성평등 문화정책 수립을 위하여』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1부에서는 양성평등 문화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하여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양현미 님이 발제, 황정미, 주유신, 임옥희, 이해경 님이 토론에 참여하였고 2부에서는 김현숙(현 아주대 교수)님이 새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주요과제 제안에 대하여 발제하였고, 임정희, 박이은경, 류준화, 권은선, 박혜숙, 박영숙 님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첫 번째 세부실천과제로 문화기관내 여성화장실 확충 등 추진

우선 여성문화의 개념 설정에서부터 양성평등문화로 해야 하지 않은지 등등 논란이 있었으나 ‘여성문화’로 의견을 모으고 우선 실질적인 실천과제 발굴을 통하여 여성문화의 지향점을 찾고자 하였다. 몇 차례의 토론을 통하여 첫 번째 세부실천과제로 문화기관내 여성화장실 확충 및 보육서비스 강화를 추진하였다. 예상은 했었지만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남녀화장실의 공간 불평등 현상은 결코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현상을 초래하는 대표적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사례로서 여성은 물론 남성까지도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 예술의 전당과 새로 리모델링 개관한 국립극장 등 7개 산하 문화기관의 화장실 확충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전국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도 여성화장실 확충 등 편의시설 확대를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체육·관광 시설까지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마침 올해 초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해 온 시민단체 등의 노력에 힘입어 공중화장실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모든 공공건물의 남녀화장실 비율은 1:1 이상이 되도록 정비되었다.

‘창의한국’ 문화비전에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제시 성 인지적 관점에서 문화정책 분석 평가 그리고 행복한 파문 만들기

지난 6월 발표한 참여정부의 문화비전에는 그동안 정책소위 등을 통하여 제기된 논의를 중심으로 양성평등문화환경 조성이라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우선 여성문화에 대한 부내 인식 확산에 중점을 두고 산하 연구기관 등을 활용한 기초 연구와 행복한 파문 만들기 라는 창작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산하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여성문화정책 기초연구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여성문화정책의 방향 제시를 할 예정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문화부에서 처음으로 여성문화정책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것에 의미를 두고 차차 더욱 발전적

3) 2003.9월 문화행정혁신위원회 산하 TF로 발족, 부내 관심있는 직원 10여명 참여(당시 공보관, 기획총괄담당관, 국제관광과장 등 국장, 과장급 및 사무관 이하 직원 등 다양하게 구성). 조직 문화 소위와 정책소위로 구분하고 매주1회 회의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정책 소위에는 외부 전문가로 김현숙(전 여성문화예술기획 정책위원장), 류정아(문화관광정책연구원), 박현경(당시 동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임정희(당시 문화연대 시민자치센터 소장) 그리고 김양희(한국여성개발원), 신미숙(전 이미경 위원 보좌관)이 참여하였다.

인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성부와 공동으로 문화기반 시설과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모든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통한 지표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행복한 파문 만들기> 행사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 처음 기획 의도는 정책 담당자들의 여성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워크숍이나 강의 등의 일률적 교육보다는 문화예술콘텐츠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여성문화에 대한 접근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문화현장에 있는 예술가들의 여성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창작 영역 계발을 통한 콘텐츠 확대를 기대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 있는 문화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여성문화포럼을 개최하는 자리에서 여성문화에 대한 보다 진지한 접근과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그 이후 한동안 고민을 거듭하다가 현장 활동가들의 수요와 부내 의견수렴을 통하여 당초 제안했던 가칭 여성문화 게릴라 프로젝트가 ‘행복한 파문 만들기’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우수기획안으로 선정된 작품 대상으로 공동창작워크숍을 거쳐 시연하는 장으로서 문화부 청사안팎에서 퍼포먼스와 점심시간 미니 콘서트 형식의 공연을 그리고 시청앞 광장에서 일반 시민들의 호응 속에 행복한 파문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만들어가면서 막을 내렸다.

부내에서 진행된 체험퍼포먼스는 여성주의 창작프로젝트 그룹 놀자궁⁴⁾의 <세종로 82-1 봉헌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약1주일간 부내에 각종 표어·전시와 설치 영상물 등으로 문화부를 장악(?)하였다.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은 일단 여성문화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문화의 다양성과 나와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퍼포먼스의 진행 방식이 너무 강제적 기제라는 비판 또한 제기되었고 직협 홈페이지에는 이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일기도 했다.

여성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과 관심 제고를 위하여 기획된 행복한 파문 만들기였으므로 양성평등과 소수자 문제, 여성문화인물 문제 등을 도발적으로 제

4) ‘놀자궁’은 유희로서의 예술과 생명 창조의 원천인 자궁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여성문화 프로젝트 그룹이며, ‘세종로82-1 봉헌프로젝트’는 기존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소통방식을 통해 역설적으로 여성주의를 이야기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참여자들 스스로가 느낄수 있도록 하는 작품이다’ 라고 기획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기한 퍼포먼스, 그리고 춤과 노래 등의 이벤트 행사는 일단 관심 촉구 측면에서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좀 더 유연하고 재미있게 퍼포먼스를 진행했다면 더욱 즐겁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텐데... 문화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퍼포먼스는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불편해했고 주관하는 쪽도 경직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물론 이 또한 기획자의 의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새로운 정책영역 및 모델 개발 - 여성문화와 관광의 만남

문화관광부라는 부처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관광은 21세기 핵심산업 중의 하나이다. 돈이 되는 관광 상품과 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원을 쏟아 붓는 정책영역이기도 하다. 2만불 시대의 관광 문화는 지금까지의 그것과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21세기 우마드 시대에 여성과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역사회 여성 문화 자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새로운 관광 작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한 것이 해남 고정희 시인 추모여행과 연계한 해남 여성과 서울 여성의 만남, 그리고 문화축제, 여성문화 테마관광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를 통한 지역 사례 발굴 등이었다. 여성문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고정희 시인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연령·지역의 여성이 만나고 GO와 NGO가 만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고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관광작품을 경험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역 여성 문화자원의 공공 문화 자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성문화인물 발굴 확대

90년 문화부 창설 이래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이달의 문화인물 사업 - 2004년까지 총 175명의 문화인물 중 여성 문화인물은 단4명. 신사임당, 허난설헌, 정부인 안동 장씨, 나혜석.

문화인물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여성문화인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5년도 문화인물에 강경애와 강정일당, 임윤지당 등 3명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성문화 TF의 성과와 한계

조직문화적 측면에서는 남성중심적 문화에서 여성에 대한 의식을 조금씩 더 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불편한 것일 수도 있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함으로써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도 조금씩 상황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감이 커져가고 한편 여타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성에 대한 부분만을 주장하기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문화정책의 다양한 영역에 성 관점 통합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처음으로 여성문화 관점에서의 정책연구를 추진함으로써 그 기초를 다져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관광연계사업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미약하나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

그러나 보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우리 부내에서조차 여성문화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 편향적 내지 우대정책으로 오해하여 각 실국의 협력과 관심이 부족하고, 여성부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의문과 이로 인하여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있는 형편이며, 실질적 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 확보조차 어려운 TF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여성문화 관련 민간단체들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민관 쌍방향의 정책생산이 활발하지 못한 형편이고 아직 여성문화정책의 지향점에 대한 대국민적 합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향후 발전적 추진전략 - 2005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그동안 TF활동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정책 기반 조성을 위한 인식 확산에 치중해왔다면 내년도에는 문화 조직과 정책 내에 공식적 자리매김을 하고 대외적 사업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다 실질적인 정책과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여성문화정책의 새로운 모델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정책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국단위 여성문화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실태조사와 연계한 여성문화정책 연구포럼을 운영함으로써 현장

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 수요자 네트워크 형성과 GO/NGO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21세기 문화 감수성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여성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여성문화아카데미 운영과 동아리활동 지원을 통하여 여성 관점의 문화기획자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 여성문화 관련단체에서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 통합·재구성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여성문화 교육적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다.

한편 내년도 여성주간 계기로 역사 속 여성들의 삶과 예술 활동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창작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과 새로운 여성문화의 창조역량 강화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창작 여건과 네트워크의 형성 등을 도모해나갈 것이다.

더 나아가 세계여성학대회 기간 중 여성과 관광 이슈의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해외의 여성 여행 활성화 사례 및 국내 여성문화 관련 여행코스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체험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나가고자 한다. 그 밖에 장애 여성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치유 여행 등 각 실·국간 연계사업 발굴을 통하여 정책 제안을 하고 있으며, 또한 부내 각 실국의 정책·법령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와 성인지 교육의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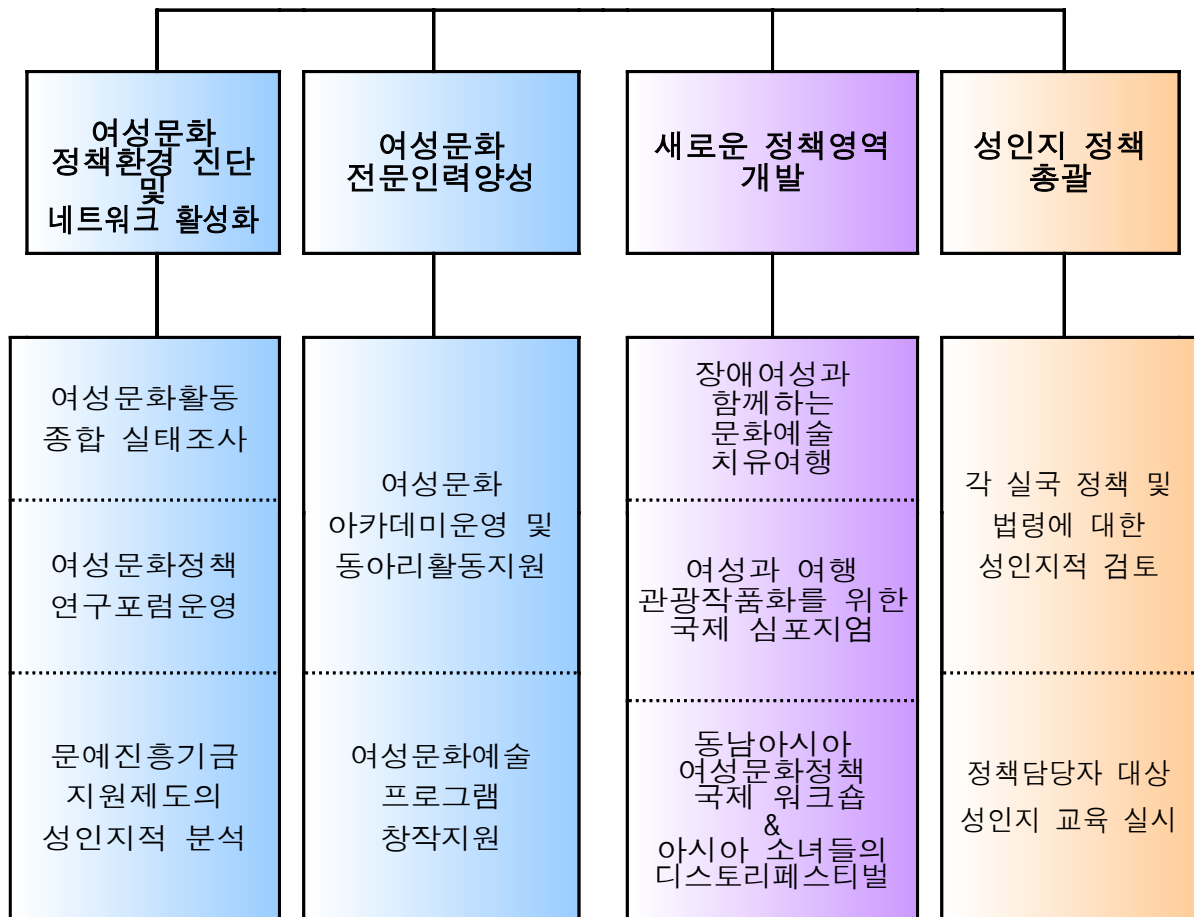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성 문화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네트워크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활발한 정책 아젠다를 생산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견제 기능은 물론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서 적절한 탄력을 주고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정책의 공고화를 기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2005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사업 체계도

여성문화정책 기반조성



4가지 전략 목표 ➡ 5개 중점사업 및 3개 연계사업
+
각 실국 성인지 정책 총괄



토론 1 : 중앙부처 여성정책의 성과와 전망(여성부)

조영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1. 여성가족부로의 전환에 따른 조정역할 강화 기대

- 정부의 통합적 가족정책에 따라 각 부처 가족정책의 조정, 지원, 평가를 총괄하게 됨.
- 건강가족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 관련 업무 여성부로 이양
- 가족 정책을 성 평등 관점에서 추진하려는 의도임.

2. 여성부의 업무 확대에 따른 반응

- 기존의 성 특정적 사업과 새롭게 추가된 통합적 가족보육정책 사업 사이의 혼란 예상
- 여성 운동 진영: 여성폭력과 차별에 관한 특정적 사업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 그러나, 젠더 관점으로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흐름 자체는 바람직함

3. 2005년 여성 가족부에 기대되는 역할들

(1) 성인지적 가족정책의 수립

- 새롭게 확보한 권한 만큼의 종합적 시스템 구축
 - 관련 사회정책에 성평등 관점 결합(조세, 고용, 사회보험, 문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 가족문제 대한 성인지적 분석
 - 가족문제에 대한 가족구성권 전체의 책임과 권리의 인식 필요
 - 연계성을 가지는 부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필요
- 예)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와 노동권 보장 : 보육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

- 여성부의 직접 지원도 필요 예) 빈곤여성가구 등
- 빈곤 · 이혼 · 입양 · 독신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 제도상에 나타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시정
 - 호주제 폐지, 아내의 공동재산권 보장, 건강가족기본법에 가족의 다양성 반영 등

(2) 실제적 평등을 향한 걸음

-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양과 질적인 발전 필요
- 가족 업무와 여성업무가 동등하게 강조되어 기존의 여성업무 간과되지 않아야 함

토론 2 : 중앙부처 여성정책의 성과와 전망

이 혜 경(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1. 2004년 여성문화 평가

- 참여정부의 문화행정혁신위원회의 16개 TFT 팀 중에 여성문화 분과 생겼음
- 여성문화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밑그림 작업이 필요했던 시기
-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와 여성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사업추진의 한계 보임
- 여성문화위원회와 여성문화담당관의 의의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함

2. 여성문화정책의 어려움

- 문화라는 정신적 영역에서도 남성의 기득권이 여전히 존재함
- 문화에 대한 인식은 늘어하나 문화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은 부족
- 지난 10여년간 NGO의 모델로서의 예들을 보여 공감을 얻어왔으나,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내는 데는 어려움 있음
-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변화이기 보다는 개인과 NGO의 열정으로 무리하게 이끌어 왔음

3. 여성문화정책의 방향

- 문화부의 양성 평등적 여성문화정책 수용: 여성문화의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함
 - 소외되지 않는 문화 수혜자로서의 여성
 - 문화의 상징, 의미 체계를 풍요롭게 할 주체자로서의 여성

- 여성부와 여성개발원, NGO의 역할
 - 공동 연구
 - 문화부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역할분담)
- 여성문화활동종합실태조사: 관점과 방향성이 중요함
- 교육: 문화 전문 인력들을 키워낼 차세대 전문교육이 필요
- 재정: 여성문화전문 인력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상 필수적임

주제Ⅱ :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江原道 女性政策의 現況과 課題

박 현 경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I. 江原道 紹介

□ 일반현황

- 면 적 : 16,874km² (임야 81%, 농경지 10%, 기타 9%)
- 인 구 : 1,533천명(남 770, 여 763 - 49.8%)
- 행정구역 : 18개시군(7시, 11군) 187읍면동

□ 지역특성

- 전국토의 17%에 이르는 넓은 면적 소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임야, 휴전선(145km)과 연결해 있어 개발가능토지는 6.6%에 불과, 수려한 자연경관과 국가안보 등으로 과다, 중복규제를 받아 옴
- 성장여건과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하고 적은인구(3.3%)로 국토개발과 정에서도 투자 우선순위에 뒤쳐짐
- 그러나 21C 들어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교통망개선, 남북관계 진전, 환동해권의 활발한 움직임 등으로 인해 신동해권 물류의 중심지, 한국관광의 1번지, 청정환경의 보전지, 신산업의 요충지, 통일한국의 1번지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강원의 비전

- 21세기 교류 및 환경의 시대에 적합한 지정학적 장점 보유
 - 환동해권의 중심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
 - 전국 제일의 청정환경과 관광자원 보유
-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 실현에 역점
 - 금강산관광의 출발지라는 상징성 활용 통일한국의 중심지육성
 - 청정환경을 바탕으로 인간존중의 「생명·건강산업수도」 육성
 - 남북과 동북아를 지향하는 고속교통망의 순환체계 구축
 - 많은 동계국제대회를 유치하여 동계스포츠의 산실로 조성
 - 기타 각 분야별 다양한 시책추진을 통해 강원도의 정체성 확립

II. 江原 女性政策의 目標와 推進方向

□ 정책목표

- "여성의 가치가 존중받고, 여성이 희망을 갖는 강원도" -

▷時代的 與件變化-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 정치·사회·경제·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정책의 중요성 더욱 증대
 - 도민의 50%인 여성의 역할과 능력에 의해 미래 강원발전 좌우
- ⇒ 21C 미래는 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인식 확산

□ 추진방향

- 여성문제가 강원도정의 핵심분야로 다루어지도록 여성정책의 실질적 추진기반을 확충
-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 및 사회교육 실시
- 지역사회 발전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평등문화 환경을 조성
-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상담과 대처기능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여 건전한 가정을 만들고 올바른 성문화를 정책
- 취약계층 여성의 적극적인 생활안정 지원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유도

III. 2004年 主要成果

□ 21C 선진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목표제 운영으로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
-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으로 여성단체 의욕적 사업추진 및 능력 개발 지원으로 실질적 여성발전 기반구축
- 시군 여성정책 종합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기반구축

□ 여성의 잠재력 향상과 사회참여 추진

- 전국 최초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강원여성대학」 운영으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인재양성
- 여성지도자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화마인드 제고 및 민간협력 증진 도모
- 역사속의 여성인물 재조명을 통한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강원 여성의 정체성 확립 및 자긍심 고취
- 기타 추진시책 : 여성정치지도자과정, 여대생 2030우먼리더십 캠프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지원, "주부명함갓기운동" 등

□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노력 강화

- 「강원도 평등문화상」 시상으로 가정·사회 전반에 평등문화 확산 정착 유도
- 양성평등문화 의식교육 강화로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한 강원도 구현
- 여성폭력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대처기능 확대·교육강화

□ 저소득층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아동정책의 질적수준 향상

- 여성복지시설 운영 및 취약여성 자립기반 조성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 외국인주부 생활안정 도모
- 농촌·도시여성 교류 활성화
-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내실화
- 보호아동 건전육성으로 올바른 사회인 육성

IV. 2005年 主要施策 推進計劃

□ 여성정책 추진기반 조성 및 기능강화

- 전국 규모의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추진
- 양성평등문화조성 유관기관 NETWORK화로 전 도내 확산
- 범 도민적 지역사회 여성인프라 구축
- 관리직여성공무원 확대 및 양성평등 인사 지원
-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설립·운영

□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단체 활성화

-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및 능력개발
- 여성지도자 육성 : 여고생 대상 리더십교육, 여대생 「지방의회인턴」 사업
- 남녀고용평등 기업문화 조성
-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심포지엄 개최

□ 평등문화 조성과 여성 권익증진 강화

- 강원 Gender Equality 한마당 개최
- 관리직공무원 양성평등 의식교육 강화
- 성매매 방지, 피해여성·종사자 상담 및 선도보호
- 여성폭력예방 전문인력뱅크 운영

□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자립기반조성

-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 지원
- 모·부자 복지시설운영 및 환경개선
- 외국인 주부 건전가정 육성
-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과 지위향상
- 『저소득층 주부 인턴제』 확대 지원

□ 한 차원 높은 보육아동 기반구축

-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기반 확립 및 환경조성

-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 결식아동 급식소 확대 및 전달 체계 보강
- 어린이가 만족하는 기념행사 확대 추진
- 보호아동 사회적응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V. 地方自治團體 關心事項

□ 여성정책 연구기능 보강

- 자치단체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고유의 여성정책 연구기능 필요
 - 광역자치단체별 특성화된 여성정책 연구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능 신설 및 보강이 요구되고 있으나,
 -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1연구원 설립"방침에 의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 여성정책 담당인력 부족

- 강원도의 경우
 - 도청 여성정책과 정원 19명(과장 1, 일반직 16, 기능직 2)
 - 여성정책 담당인력 : 12명(제외-과장 1, 기능 2, 보육아동 4)
 - 시·군(18) : 여성정책과가 설치된 곳은 3개시에 불과함
 - 여성관련 담당인력 : 시군별 평균 3~4명에 불과함
- ▷ 2001년(1월 29일)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시도에는 여성관련국, 시군은 여성관련 課 또는 擔當이 신설되었으나 인력증원은 없었음
- 이제 여성부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신규업무 생산과 업무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인력으로는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음

□ 여성정책 관련예산 국비지원 미흡

- 신규 여성정책 추진에 따른 국비지원 절실
 - 국비지원액 중 순수 여성정책 및 여성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은 전

무한 실정임

- 여성부의 시도 지원예산은 보육사업비가 주를 이루고 있음

○ 강원도의 경우

- 여성정책과 국비지원 전체예산 중 보육·아동분야가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관련분야 국비지원액은 9%에 불과함

주제Ⅱ :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 영 세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연구실장)

I. 여성정책 기구

1. 충청남도여성정책관실

- 조직 : 여성정책계, 여성복지계, 여성교육계, 보육계
- 인원 : 총 15명, 4급 1명, 5급 4명, 6급이하 10명

2.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정책연구실(연구팀, 교육팀), 행정실
- 보육정보센터,
- 충남여성자원활동센터
- 인성학습원(예정)

3. 충남여성포럼

- 비영리법인
- 충남여성 정책개발수립에 필요한 정책대안제시
- 정치경제법률분과, 교육사회문화분과, 복지환경분과, 농촌분과

II. 여성관련예산

- 충청남도 예산 : 2004년 총 44,513백만원(국비 32,819, 도비11,694)
2005년 총 63,146백만원(국비 41,528, 도비 21,618)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업비 합계 | 국 비 | 도 비 | 비 고 |
|-------------------|-------|-----------|--------|--------|-------------|
| 합 계 | | 63,146 | 41,528 | 21,618 | |
| <국 고 보 조 사 업> | | 60,078 | 41,528 | 18,550 | |
| 영유아 보육사업 | 8건 | 59,282 | 40,950 | 18,332 | |
| 성·가폭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 6건 | 591 | 407 | 184 | |
| 성매매 방지 및 선도보호사업 | 2건 | 182 | 148 | 34 | |
| 여성지도자육성 지원사업 | 1건 | 4 | 4 | - | |
|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 | 2건 | 19 | 19 | - | |
| <자 체 사 업> | | 3,068 | - | 3,068 | |
| 여성주간기념사업 지원 | 1식 | 15 | - | 15 | |
| 장애아·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 | 2건 | 108 | - | 108 | |
| 보육인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사업 | 3건 | 31 | - | 31 | |
|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 지원 | 2천명 | 144 | - | 144 | |
|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 16천명 | 720 | - | 720 | |
| 공립·법인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 240개소 | 72 | - | 72 | |
| 성·가폭방지사업 지원 | 4건 | 55 | - | 55 | |
|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 1식 | 150 | - | 150 | |
| 여성사회교육 사업 | 1건 | 26 | - | 26 | |
| 『유관순賞』 운영 지원 | 1식 | 50 | - | 50 | |
|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지원 | 1개소 | 1,278 | - | 1,278 | |
| 성매매피해자 치료 사업 | 1건 | 16 | - | 16 | |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 3개소 | 403 | - | 403 | 지방분권 교부세 |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예산 : 2004년 총 1,245백만원

2005년 총 1,274백만원(연구사업비 180백만원)

Ⅲ. 2005년도 주요여성정책 추진계획

| 1. 여성의 사회참여 제고를 위한 지원확대 | |
|-------------------------------|--|
| (1) 여성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순회교육프로그램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인력개발센터」 인근 시군으로 이동 개설운영 - 교육이수자 「자격증 취득」과 「취업알선」 우선지원 |
| (2) 특성화된 여성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2030우먼리더십캠프, 지방의회인턴사업, 여성정치지도자과정 ○ 여성경제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 - 소자본 창업과정, 지식재산권갖기 설명회, 취업정보 안내 ○ 도농간 차별화되고 지역실정에 부합한 프로그램 운영 - 도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하여 농어촌 여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 2.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권익보호 | |
| (1)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의 강력한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방지를 위한 홍보강화와 인식변화 유도 - 건전한 음주문화·성문화 정착을 위한 예방교육 및 토론회 개최 등 - 여성단체를 통한 홍보물 배포, 캠페인 전개 등 대대적 홍보 실시 ○ 성매매 우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 민관경합동지도·단속(수시), 불법유해광고물 근절운동 전개(연중) ○ 전통적 성매매 우려업소에 대한 현장 상담활동 강화(3개 지역) ○ 충남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 운영(20개 기관 23명참여) |
| (2) 가정·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활동 강화 - 상담소 등 관련시설과 연계 홍보활동 및 이동상담 실시 ○ 피해자에 대한 보호서비스 수준 제고 - 상담관계자 능력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상담소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 긴급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여성폭력 「긴급의료센터」 운영 |
| (3) 가정폭력 피해가족 치료프로그램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가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프로그램 운영 - 피해여성 : 정신적·신체적 치료, 법률구조 지원, 직업훈련 - 피해자녀 : 전문치사에 의한 심리·미술·원예 치료 - 가해자 : 재발방지를 위한 교정·치료 프로그램 |

| 3. 보육의 공공성 강화 | |
|-------------------------------|--|
| (1) 보육의 체계적·종합적 추진기반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보육조례 제정·시행 -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보육사업 지원범위·방법 등 구체화 ○ 충남보육정책5개년계획 수립 - 충남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비전, 분야별 핵심추진과제 등 제시 ○ 어린이 인성학습원 건립 추진(상반기중 건축공사 발주) - 2006년 1월 개원 목표 |
| (2) 보육교사 「인력풀 체계」 구축 및 처우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인력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3월중) ○ 민간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1,300명 월 5만원) ○ 대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출산·교육시 3만원/일/인) |
| (3) 보육시설 공공성 강화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기능보강 확충(40개소) - 국공립시설 신축30, 장애아전담시설 신축1, 시설 증개축9 ○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지원(46개소) - 휴일보육시설16, 시간연장형시설30 ○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및 차액보육료 지원(16천명) |

IV. 지방 여성정책의 과제

1.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한 기반마련

(1) 추진부서의 역할 정립 및 인력 확충

여성정책전담기구인 여성정책관실이 부지사직속으로 편제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는 성 주류화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여성복지계, 여성교육계와 2004년에 이관된 보육계 등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여성정책계는 여성정책관실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총괄, 여성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남녀평등적 관점에 의한 정책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 등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성 주류화 업무를 공식적 업무로 명시하고 국별로 성 주류화를 담당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정한다.

(2)지원체계 확립

충남여성발전위원회, 충남여성포럼, 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정책을 협의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각종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 조직들이 활성화되어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방향과 관심사가 반영되고 성 주류화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 및 계획, 운영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특별히 여성 혹은 남성을 위해서 계획·집행되는 정책이나 예산뿐만 아니라 성 중립적인 정책이나 일반주류예산이 남성과 여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 집행되고 그 효과가 남녀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4)우선집단에 대한 성인지 교육

정책 담당자와 수행자, 지방의회 의원 등 우선적으로 성인지적인 관점이 필요한 집단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2. 지방정부출연 여성정책연구소의 역할과 정체성 확립

(1)지역여성의 실태와 욕구를 반영하는 연구의 수행

중앙과 구별되는 지역여성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여성의 실태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초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차원의 기초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연구재정의 취약함, 단기적 현안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개발 요구 등으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여성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연구와 지역의 현장성이 반영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지역여성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

여성문제와 정책에 대한 인식이 취약한 지역여성들이 실질적인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연구와 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 자신감과 창의성 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여성 소모임들을 활성화하는 방안연구과 모델개발 및 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여성정책관련기관들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식적이고 제도적으로는 중앙과 비슷하게 갖추어져 있는 지역 여성관련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 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는 조직정비나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자율성, 독립성을 인정하고 협력과 공존 관계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종합토론

□ 질의(서미석 (재)서울여성 교류지원부 팀장)

- 지역연구기반 취약
 - 지역 여성연구의 부족으로 사업계획, 집행에서의 이론적 근거가 미약함.
 - 여성개발원에서 전국 단위의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정책건의 하면서 지역에 특화된 내용 포함해 주길
 - 여성부도 중앙정부차원의 회의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지자체에 압력과 전달체계 잘 갖추면 지방여성정책의 활성화 이루어질 것임.

□ 답변(조진우)

-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온 문제로, 현재 개정 과정 중에 있는 여성발전기본법 내용에 이 부분을 고려할 것임.

□ 질의(백다래 숙명여대 여성학 협동과정)

- 강원도의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사업: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기준과 예산비율, 지원방식 등

□ 답변(박현경)

- 현재 1,334 세대에 교육과 생활비 지원

□ 질의(이미원 대구경북연구원 여성개발센터 설립 준비단장)

- 지역 여성정책담당관들의 지역 여성운동단체에 대한 시각 부정적
 - 중앙의 NGO와 GO간의 관계가 우호적인 반면 지방은 배타적
 - 여성개발센터가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
- 대구여성 NGO 1세대들은 현재 '고령여성 문화'에 대한 연구 활동 전개 중

- 중앙의 정책 수립과정에서 지역의 여러 기관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 여성부 인적자원개발 연구포럼에 지역의 여성자원개발 연구부 참여하지 못했음.

□ 답변(김양희)

- 여성부 용역으로 실시한 성인지전략기획연구 사업에서도 지역 여성정책 활성화의 필요성 대두되었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여성정책에 대한 여론을 형성시키기 위한 정부와 범여성계의 논의가 필요함.

□ 질의(정춘숙 서울 여성의 전화 부회장)

- 여성 가족부에서도 여성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정 총괄하는 기능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여성 폭력관련 법 마련되었으나 법과 현실의 괴리 여전
 - 폭력 피해 여성들의 정당방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정책 필요
- 여성보호센터에 대한 인식변화 교육과 지침 필요
 - 상담소, 쉼터를 다른 지역 여성이 이용하는데 대한 주민들의 반발 있었음.
- 여성의 재산권 획득을 위한 정책과제
 - 재산의 공동명의 시, 취득세 면세와 등록세에 대한 한시적 완전면세 가능하도록
 - 조세, 보험 등 사회의 자원을 여성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연구 필요

□ 답변(김양희)

- 부부별산제, 상속세 면세 필요
- 가정법률상담소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내용

□ 서명선

- 정책과제개발, 현황 파악을 위해 여성개발원과 NGO, 지방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
 - 여성부 주관 시도국장 간담회에 여성개발원 참석 시켜주기 바람.
 - 여성개발원 자체에서는 지역 여성개발원과의 만남 추진할 것임.
 - 여성부와 개발원, NGO의 연계 역할 요구됨.

□ 질의(조영숙)

- 2005년 중앙여성부의 기능이 각 지방으로 분할
 - 지자체에서 여성부의 업무가 어떻게 가동될 것인가?
 - 또한 여성부는 어떻게 지방과 연계할 것인가?

□ 답변(조진우)

- 지방분권화로 인한 지방이양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폭력 관련 업무는 계속됨.
- 여성부는 밀양사건 등의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 피해자 보호 차원의 준비와 예산확보를 해 두었음

□ 이해경

- 여성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
 - 투자가 전혀 없음
 - 여성사전시관의 박물관 전환 프로젝트 진행상황 모호
- 이슈중심(복지·노동·육아 중심), 의미생산, 여성의 창의성, 문화 연대에 중심을 둔 사업이 요구됨
- 여성부의 문화부에 대한 요구와 조정 역할 보다 적극적으로
 - 여성부내 여성문화위원회 설치하여 문화비전 세울 수 있기를 바람.

□ 사회자

-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기능 강화되어야함.
- 여성정책의 영역 확대되지만 여전히 취약한 분야는 과제로 남아있음. 예) 비정규직 보호입법, 보건문제, 인권보장 차원에서 성적자기결정권 문제, 연금법 확대, 호주제, 재산권 등
-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보편적인 양육자모델로 변화하는 가운데 모성보호가 개선되고 여성의 사회적 기회 확대되어야함. 여성부가 가족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면서 통합적인 가족정책 패러다임 추진하기를 바람.
- 정책의 품질향상을 위한 성별영향평가가 정부 정책을 성인지 관점에서 혁신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여성계 전체의 모니터와 압력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지자체 여성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부에서 여성정책을 모범적으로 연계하고, 역할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임.